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2023. 10

엄근용·이준범·전영준

■ 들어가는 말	4
■ 재정체계와 시설사업비	5
■ 시설사업 예·결산 집행 현황	11
■ 시사점 및 결론	40

- 정부의 건설투자는 경기 위축의 대응 수단으로 건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건설투자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본 고는 건설업체가 정부의 건설투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시설사업예산(이하, 시설사업비)'을 제언하였음.
 - 대부분의 건설투자 관련 선행연구는 건설투자 규모를 SOC 예산으로 측정하여 분석의 초점을 'SOC 예산'에 두었음. 그러나, SOC 예산의 세부 비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연구개발출연금,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공사비와 관련이 적은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 정부의 건설투자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측정될 가능성이 큼.
 - 반면, 시설목적물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총액을 의미하는 시설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으로 구성되어, 건설업의 실제 경제활동을 가장 근접하게 측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시설사업비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정부의 건설투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임.
- 분석 기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SOC 분야 예·결산 규모(예·결산액)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하며, 이로 인해 전체 예·결산액에서 SOC 분야 예·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음.
- 또한, 시설사업비 예·결산액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감소 이후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전체 예·결산액에서 시설사업비 예·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하락함.
- 중앙정부의 시설사업비는 다른 비목과 달리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게 나타남. 한편, 지방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게 도출된 가운데 SOC 분야의 예·결산 차액이 다른 분야의 예·결산 차액과 비교하여 특히 큰 규모를 차지하였음.
 - 이를 통해, 시설사업비에서 매년 대규모의 불용액 및 예·결산 차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규명하여, 공공 부문 건설투자 효과의 실효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음.
- 대내외 환경변화로 건설투자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건설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건설투자의 실효성 개선을 통한 건설투자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함.
- 본 고는 지역별·부처별로 SOC 예·결산 규모, 시설사업비 예·결산 규모, 불용액으로 대표되는 예·결산 차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건설투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올바른 건설투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이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함.

I 들어가는 말

- ❖ 건설투자는 생산성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함.

 - 특히, 정부의 건설투자는 경기 위축 대응 수단으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함.
- ❖ 정부의 건설투자를 나타내는 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심으로 그동안 책정 및 발표되어왔으나, 건설산업에서 체감하는 규모와는 괴리가 있음.

 - SOC 예산의 세부 비목에는 연구개발출연금,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공사비와 관련이 적은 항목도 SOC 예산에 반영되어 당해연도에 미치는 정부의 SOC 투자 효과는 실질적으로 축소됨.
- ❖ 또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SOC 예산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세부 시설별 예산 분포 및 지역별 예산 분석에 제한적임.

 - 기존 SOC 예산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의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한정되는 것에 반해 시설사업비는 외교부, 법무부 등 SOC 예산보다 다양한 부처에 폭넓게 분포됨.
- ❖ SOC 예산에 비해 시설사업비는 시설물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시설 예산의 총액,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건설업체가 정부의 건설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의 건설투자 예산 분석이 가능함.

 - SOC 예산은 청사 등과 같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설투자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시설사업비는 토목 및 건축 모두를 포함하여 정부의 건설투자 효과를 나타냄.
- ❖ 또한, 지방정부의 시설사업비 예·결산 분석은 지방정부의 건설투자 규모 분석에도 용이함.
- ❖ 이에 본 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건설투자 규모와 실효성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이자 기초자료 제공목적으로 지역별/부처별 SOC 분야 및 시설사업비 예·결산 추이의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SOC 분야와 시설사업비, 예산과 결산 등의 분석을 수행함.
 - 이를 통해 본 고에서는 기존 연구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발굴하고 건설투자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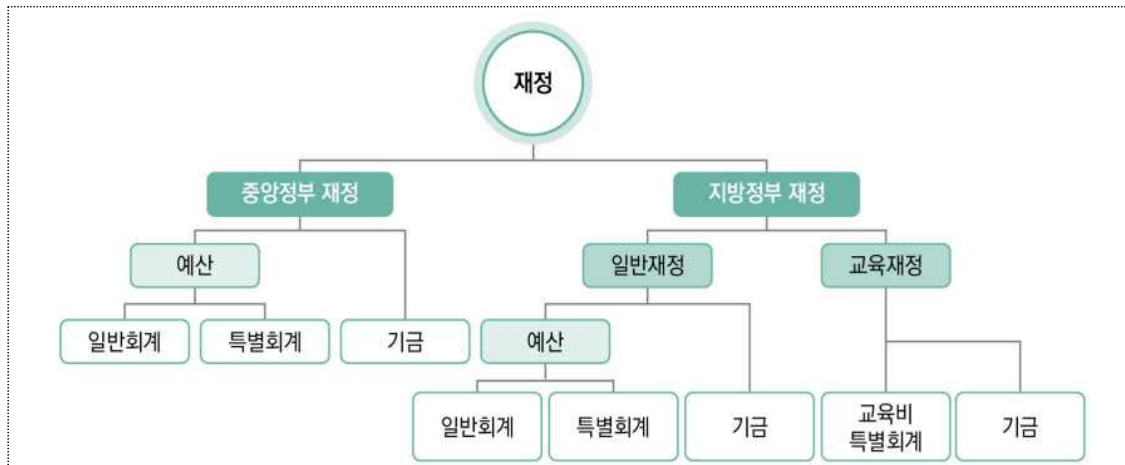
II 재정체계와 시설사업비

1. 재정체계

▣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통틀어 ‘재정 활동’으로 칭할 수 있음.

- 재정 활동은 조세 징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출 활동을 비롯해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통칭함.
- 재정은 ‘운용 주체’에 따라 ①중앙정부 재정(이하 중앙재정)과 ②지방정부 재정(이하 지방재정)으로 구분됨. 중앙재정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정 활동을 의미하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 활동과 교육자치에 의한 교육 재정 활동으로 구분됨.
- 또한, ‘운용 수단’에 따라 ①예산과 ②기금으로 구성됨. 여기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됨. 기금은 예산과 유사한 형식으로 편성·심의·의결되지만, 예산과 비교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 운용 수단임. 2023년 중앙정부의 기금 수는 총 68개(총 24개 부처)이고, 기금조성액은 총 893.1조원 수준임.¹⁾ 또한, 2022년말 기준 지방정부의 기금 수는 총 2,431개이고, 기금조성액은 총 52.4조원 수준임.²⁾
- ‘자금 흐름’에 따라 ①수입과 ②지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분석이 가능함. 이는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을 비롯한 모든 재정 운용 수단이 들어오는 돈(수입)과 나가는 돈(지출)으로 구성되기 때문임. 한편,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수입을 ‘세입’, 예산의 지출을 ‘세출’로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수입·지출 활동을 기금의 수입·지출 활동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

〈그림 1〉 재정의 체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 1) 국회예산정책처(2023.3), “2023 대한민국 재정”.
- 2) 행정안전부(2023.5),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 예산분류 체계와 SOC 예산

■ 중앙정부의 예산 체계는 크게 12개 분야로 구분되며,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 따라 16개 분야로 분류되기도 함.³⁾

- 중앙정부의 12개 분야별 예산 체계를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SOC(Social Overhead Capital),’ 분야로 체계화됨.
- 중앙정부의 16개 분야별 예산 체계를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분야로 체계화됨.
- 일반적으로, SOC 예산이란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을 합계하여 도출된 금액을 의미함.

〈표 1〉 중앙정부의 예산 분야 및 부문별 예산 체계

분야	부문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법무 및 검찰, 법원 및 헌재, 재난관리...
통일·외교	외교통상, 통일...
국방	병력운영, 방위력개선, 전력유지 ...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
환경	물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
사회복지	공적연금, 주택, 기초생활보장 ...
보건	건강보험,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농림수산	농업농촌, 수산어촌, 임업산촌, 식품업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산업혁신지원, 창업 및 벤처 ...
교통 및 물류	철도, 도로, 물류 등 기타, 해운·항만, 항공·공항, 도시철도
통신	우정, 정보통신, 방송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수자원, 산업단지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연구개발,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
예비비	예비비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3) 프로그램 예산 체계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세부사업을 하나의 정책사업(프로그램)에 집계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운용을 통해 예산 전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함.

❖ 지방정부의 예산 체계는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 따라 구분된 중앙정부의 예산 체계를 준용하여 총 13개 분야로 구분됨.

- 지방정부의 예산 체계는 중앙정부의 예산 체계와 달리 ‘통일·외교, 국방, 통신’ 부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의 예산 체계는 총 13개 분야로 구성되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분야로 체계화되어 있음.
- 한편, 지방정부의 SOC 예산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을 합계하여 도출된 금액을 의미함.

〈표 2〉 지방정부 예산 분야 및 부문별 예산 체계

분야	부문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
교통 및 물류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기술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3. 예산에서의 시설사업비

- 예산 체계는 분야 및 부문을 기준으로 구분된 ‘기능적’ 분류체계임.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체계는 세입 또는 세출이 가진 ‘성질’에 의해 ‘통계목’이라는 분류 기준을 활용한 또 다른 구분이 가능함.
- 특히, ‘통계목’을 통해 세부사업을 형식적인 하나의 세출 단위가 아니라 세부사업이 집행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
- 시설사업비는 시설목적물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시설 예산의 총액으로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건설업의 경제활동과 가장 근접함.
- 시설사업비에 부합되는 통계목은 중앙정부의 경우 건설보상비(410)와 건설비(420)이고, 지방정부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401)임.
 - 중앙정부의 건설보상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비 및 기타 부대경비(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로 구성되며, 건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됨.
 - 지방정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401-01), 시설부대비(401-03), 행사관련시설비(401-04)로 구성되며, 시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성됨.

〈표 3〉 통계목별 예산 체계-중앙정부

성질별		
100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200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280 정보보안비	280-00 정보보안비...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310-01 손실보상금...
	360 연구개발출연금	360-01 연구개발인건비.....
400 자본지출	410 건설보상비	410-00 건설보상비
	420 건설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420-02 실시설계비, 420-03 공사비, 420-04 감리비, 420-05 시설부대비
	490 지분취득비	490-00 지분취득비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510-01 국내차입금 상환...
600 전출금등	610 전출금등	610-01 일반회계 전출금...
700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710-01 예비비...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표 4〉 통계목별 예산 체계-지방정부

성질별		
100 인건비	101 인건비	10101 보수...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7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1 차입금이자상환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40104 행사관련시설비
	407 국외자본이전	40701 국외자본이전
500 용자 및 출자	501 용자금	50101 민간용자금
	502 출자금	50201 출자금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원금상환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602 예치금	60201 일반예치금...
700 내부거래	701	70101 기타회계전출금...
	706 기타내부거래	70601 감가상각비...
800 예비비 및 기타	801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802 반환금기타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4. SOC 예산과 시설사업비

- SOC 예산과 시설사업비는 SOC 예산으로 분류된 세부사업 중 규모가 큰 세부사업에 배정된 세출예산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SOC 예산과 시설비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SOC 예산과 시설사업비의 관계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특정 세부사업이 SOC 분야에 분류되어 있더라도, 해당 세부사업에 배정된 세출예산이 모두 시설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님.
 - 예컨대, SOC 예산으로 분류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 현액 20억원 중 10.1억원이 집행되었는 바(집행잔액 9.9억원 발생), '시설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6.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인 3.5억원은 '전산개발비'로 지출되었음.
 - 또 다른 예로는, SOC 예산으로 분류된 건설공시장 안전점검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 현액 5.6억원 중 5.6억원이 모두 집행되었는 바(집행잔액 미발생), 전체 예산 중 '시설비'로 지출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금액이 '사무관리비'로 지출되었음.

〈표 5〉 서울시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 이외의 비목 사례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예산현액 20억원)		
집행잔액	집행액	
9.9억원	시설사업비 6.6억원 (시설비 6.6억원)	전산개발비 3.5억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예산현액 5.6억원)		
집행잔액	집행액	
0원	사무관리비 5.6억원	

- ❖ SOC 예산은 연구개발비, 인건비, 출연금, 출자금 등 하나의 기반 시설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행위가 발생되기 이전 구상단계의 비용부터 포함되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산단, 물류 등의 시설물에 국한됨.

 - SOC 예산은 도로, 철도, 공항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가덕도 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비, 공항개발조사 연구용역비 등과 같은 건설행위 발생 이전의 개발행위 구상단계의 비용 등이 반영됨.
 - 이외 화물자동차지원,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자보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대중교통지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등 사회복지성 비용도 포함됨.
 - 주로 토목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집계되며, 장래의 건설산업에 투자될 내용이 반영됨.

- ❖ 반면, 시설사업비는 건설비와 건설보상비로 구성되며, SOC 외에 SOC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는 각 부처의 청사, 관사, 박물관 등의 시설물 신설과 더불어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포함됨.

 - 2023년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사업비는 SOC 분야로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 분야의 시설관리사업 건설비, 통신 분야 금융투자국사건립사업 건설비 등이 집계됨.
 - 시설사업비는 SOC 예산에서 나타나지 않는 건축 관련 비용도 반영되며, 건설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건축과 토목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나타남.
 - 건설사업비는 SOC 예산에 비해 당해년도 건설투자비용이 반영됨.

- ❖ 따라서, SOC 예산과 함께 시설사업비에도 초점을 두어,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량 규모와 재정 건설투자의 정책 방향을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

Ⅲ 시설사업 예·결산 집행 현황

1. 중앙정부

(1) 예산⁴⁾

▣ 우리나라의 연간 총예산액은 연평균(2011~2023) 9.1% 증가하며, 2023년 638.7조원에 이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총예산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예산 분야 중 2023년 기준 사회복지(32.2%), 교육(15.1%), 일반·지방행정(17.6%) 비중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SOC 예산은 4% 수준에 불과함.

〈표 6〉 연도별 분야별 예산액 추이(2010~2023)

(단위 : 조원, %)

분야명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공공질서 및 안전	12.9	4.4%	16.9	4.5%	20.8	4.1%	22.3	4.0%	22.3	3.7%	22.9	3.6%	
과학기술	4.3	1.5%	6.6	1.7%	8.2	1.6%	9.0	1.6%	9.6	1.6%	9.9	1.5%	
교육	38.3	13.1%	52.9	14.1%	72.6	14.2%	71.2	12.8%	84.2	13.8%	96.3	15.1%	
SOC	교통 및 물류	17.5	6.0%	20.3	5.4%	19.2	3.7%	21.4	3.8%	22.8	3.8%	20.8	3.3%
	국토 및 지역개발	7.6	2.6%	4.5	1.2%	4.0	0.8%	5.1	0.9%	5.1	0.8%	4.2	0.7%
국방	29.0	9.9%	36.7	9.8%	48.7	9.5%	51.4	9.2%	53.0	8.7%	55.3	8.7%	
농림수산	17.3	5.9%	19.3	5.1%	21.5	4.2%	22.7	4.1%	23.7	3.9%	24.4	3.8%	
문화 및 관광	3.9	1.3%	6.1	1.6%	8.0	1.6%	8.5	1.5%	9.1	1.5%	8.6	1.3%	
보건	7.3	2.5%	10.4	2.8%	13.5	2.6%	14.7	2.6%	22.7	3.7%	20.0	3.1%	
사회복지	73.9	25.2%	105.3	28.0%	167.0	32.6%	185.0	33.2%	195.0	32.1%	206.0	3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1	5.2%	16.4	4.4%	23.7	4.6%	28.6	5.1%	31.3	5.2%	26.0	4.1%	
예비비	2.1	0.7%	3.0	0.8%	3.4	0.7%	8.6	1.5%	3.9	0.6%	4.6	0.7%	
통일·외교	3.3	1.1%	4.5	1.2%	5.5	1.1%	5.7	1.0%	6.0	1.0%	6.4	1.0%	
일반·지방행정	48.7	16.6%	58.0	15.5%	79.0	15.4%	84.7	15.2%	98.1	16.1%	112.2	17.6%	
통신	6.2	2.1%	7.6	2.0%	7.9	1.5%	8.4	1.5%	9.0	1.5%	9.0	1.4%	
환경	5.4	1.8%	6.8	1.8%	9.0	1.8%	10.6	1.9%	11.9	2.0%	12.2	1.9%	
총합계	292.8	100.0%	375.4	100.0%	512.3	100.0%	558.0	100.0%	607.7	100.0%	638.7	100.0%	

주 : 2010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2010년 일반·공공행정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 통일·외교 예산은 2015년 외교·통일 예산을 반영함.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4) 총지출 기준이며,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 활동의 규모 파악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연간 총예산액은 연평균(2011~2023) 9.1% 증가한 것에 반해 SOC 예산은 매년 비중 감소 및 증가율 둔화가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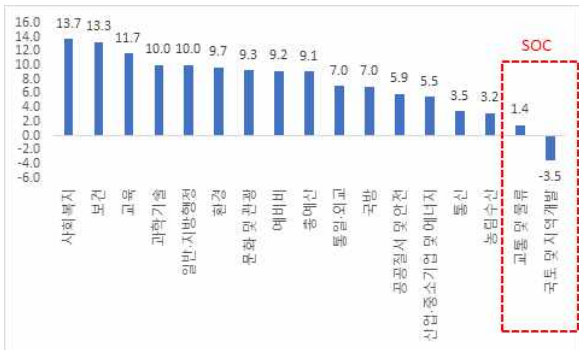
- SOC 예산 중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은 매년 1.4% 증가에 그쳤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매년 3.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예산액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교육, 일반지방행정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SOC 및 그 외의 예산 비중은 하락함.

-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0년 25.2%에서 2023년 32.2%로, 교육예산은 2010년 13.1%에서 2023년 15.1%로 상승한 반면, SOC 예산은 2010년 8.6%에서 2023년 3.9%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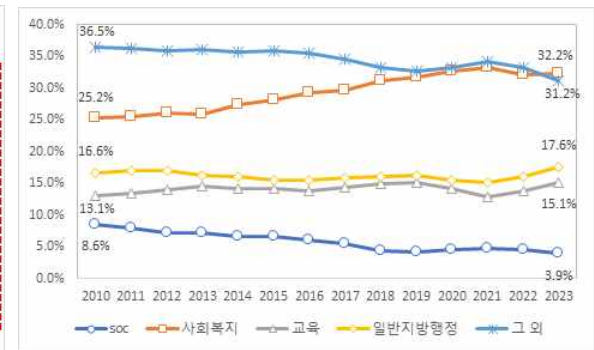
〈그림 2〉 분야별 예산액 연평균 변동률(2010~2023)

(단위 : %)



〈그림 3〉 연도별 분야별 예산액 비중 추이(2010~2023)

(단위 : %)



주 : 연평균 증가율=(2023년 분야별 예산-2010년 분야별 예산)/2010년 분야별 예산×100/13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SOC 예산액은 연평균(2011~2023) 3.8% 감소하며, 2023년은 25.0조원 수준임. 건설비가 SOC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SOC 예산 비목 중 2023년 기준 건설비(25.5%), 일반출연금⁵⁾(20.5%), 자치단체이전⁶⁾(14.3%), 출자금(8.7%)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5)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를 출연하는 기관운영출연금,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출연금, 금융성기금 출연금, 민간기금 출연금으로 구성됨.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등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방재정교부금 차 소방안전 교부금 등의 자치단체교부금,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지급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구성됨.

〈표 7〉 비목별 SOC 예산액 추이(2010~2023)

(단위 : 억원, %)

지출목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SOC 예산	251,106	100.0%	248,069	100.0%	232,311	100.0%	265,090	100.0%	279,683	100.0%	249,881	100.0%	
시설사업비	건설보상비	17,488	7.0%	21,355	8.6%	8,580	3.7%	8,255	3.1%	13,821	4.9%	14,062	5.6%
	건설비	99,173	39.5%	73,081	29.5%	59,912	25.8%	63,831	24.1%	66,286	23.7%	63,642	25.5%
	합계	116,661	46.5%	94,436	38.1%	68,492	29.5%	72,086	27.2%	80,107	28.6%	77,704	31.1%
시설사업비 외	134,445	53.5%	153,633	61.9%	163,819	70.5%	193,004	72.8%	199,576	71.4%	172,177	68.9%	

주 : 2017년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 출연금은 일반출연금으로, 2018년 토지매입비는 건설보상비로 비목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함.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특히, 전체 예산에서 SOC 예산액이 감소한 가운데 SOC 예산액에서 시설사업비는 2010년 11.7조원에서 2023년 7.8조원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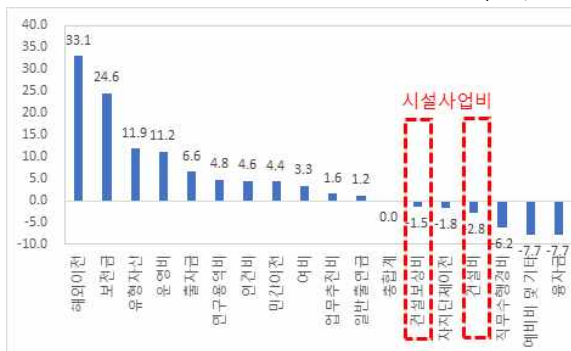
- SOC 예산 중 국제협력기구 지원 등의 해외이전비, 보전금(배상금, 포상금 등), 유형자산비, 운영비는 10% 넘게 증가한 반면, 건설비는 2010~2023년 동안 매년 2.8% 감소하였으며, 건설보상비도 매년 1.5% 감소함.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의 비중은 35.2%(2010~2023년 연평균)에 불과하며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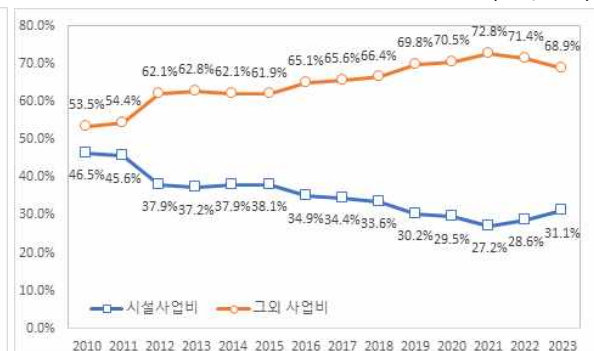
-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 비중은 2010년 46.5%에서 2023년 31.1%로 하락함. 반면, 시설사업비 외의 비중은 2010년 53.5%에서 2023년 68.9%로 상승함.

〈그림 4〉 SOC 예산 비목별 연평균 변동률(2017~2023) 〈그림 5〉 SOC 예산 시설사업비 비중 추이(2010~2023)

(단위 : %)



(단위 : %)



주 : 연평균 증가율=(2023년 비목별 예산-2010년 비목별 예산)/2010년 분야별 예산×100/13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한편, SOC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시설사업비의 실태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연간 총예산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자치단체이전비가 238.7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자치단체이전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교부금, 자본보조, 대행사업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총 예산 중 37.4%를 차지함.
- 그다음으로 민간이전비⁷⁾(19.3%), 인건비(7.3%), 용자금⁸⁾(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사업비(건설비+건설보상비)는 2.9% 수준임.

〈표 8〉 비목별 총예산액 추이(2010~2023)

(단위 : 억원, %)

지출목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총예산	2,928,159	100.0%	3,754,033	100.0%	5,122,504	100.0%	5,579,872	100.0%	6,076,633	100.0%	6,387,277	100.0%	
시설사업비	건설보상비	31,243	1.0%	34,373	0.9%	15,420	0.3%	15,208	0.3%	23,624	0.4%	27,821	0.4%
	건설비	166,102	5.7%	148,684	4.0%	139,669	2.7%	153,448	2.8%	162,516	2.7%	158,766	2.5%
	합계	197,345	6.7%	183,057	4.9%	155,089	3.0%	168,656	3.1%	186,140	3.1%	186,587	2.9%
시설사업비 외	2,730,814	93.2%	3,570,976	95.1%	4,967,415	97.0%	5,411,216	96.9%	5,890,493	96.9%	6,200,690	97.1%	

주 : 2017년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 출연금은 일반출연금으로, 2018년 토지매입비는 건설보상비로 비목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함.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총예산에서 시설사업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함.

- 민간이전비, 자치단체이전비, 보전금은 매년 10% 이상 증가한 반면, 건설비는 2010~2023년 동안 매년 0.3% 감소하였으며, 건설보상비는 매년 0.8% 감소함.

❖ 비목별 예산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시설사업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 시설사업비 비중은 2010년 6.7%에서 2023년 2.9%로 하락함. 반면, 민간이전비의 비중은 2010년 15.3%에서 2023년 19.3%로 상승함.

7)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연금지급금, 보험금, 이차보전금, 구호 및 교정비, 민간자본보조,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고용부담금의 세목으로 구성됨.

8) 비금융공기업 용자금, 통화금융기관 용자금, 비통화금융기관 용자금, 기타 민간용자금, 지방자치단체 용자금의 세목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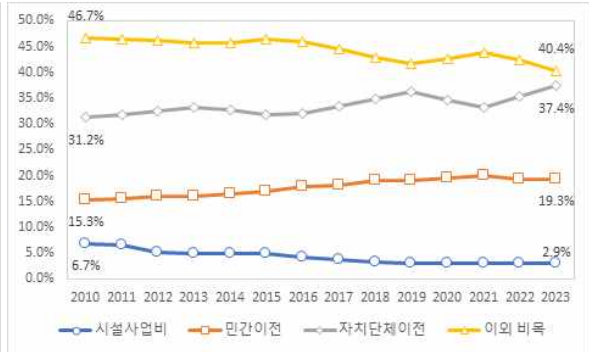
〈그림 6〉 총예산 비목별 연평균 변동률(2010~2023)

(단위 : %)



〈그림 7〉 총예산 비목별 비중 추이(2010~2023)

(단위 : %)



주 : 연평균 증가율=(2023년 비목별 예산-2010년 비목별 예산)/2010년 분야별 예산×100/13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예산에서 SOC 예산 및 시설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어 공공건설투자의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경우 공공의 실질건설투자 효과는 더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2) 결산⁹⁾

- ❖ 우리나라의 연간 총결산액은 연평균(2011~2022) 7.6% 증가하며 2022년 1,389.1조원에 이룸.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총결산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결산 분야 중 2022년 기준 일반·지방행정(33.2%), 사회복지(30.3%), 교육(7.2%) 비중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SOC 결산액은 3.3%에 불과함.

9) 결산자료는 세부 비목 등의 제공이 총계기준으로만 제공됨.

〈표 9〉 연도별 분야별 결산 지출액 추이(2010~2022)

(단위 : 조원, %)

분야명	2010		2015		2020		2021		2022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공공질서 및 안전	12.7	1.7%	17.0	1.9%	21.4	1.7%	22.0	1.7%	22.7	1.6%	
과학기술	4.5	0.6%	6.7	0.7%	8.5	0.7%	9.3	0.7%	9.7	0.7%	
교육	39.8	5.5%	53.3	5.9%	75.9	6.1%	82.2	6.2%	99.8	7.2%	
SOC	교통 및 물류	31.8	4.4%	40.2	4.5%	37.0	3.0%	42.1	3.2%	36.3	2.6%
	국토 및 지역개발	12.4	1.7%	8.2	0.9%	8.8	0.7%	10.1	0.8%	10.2	0.7%
국방	30.9	4.2%	38.4	4.3%	50.3	4.0%	53.1	4.0%	10.2	0.7%	
농림수산	31.1	4.3%	33.4	3.7%	39.4	3.2%	38.6	2.9%	38.8	2.8%	
문화 및 관광	5.2	0.7%	7.6	0.8%	10.0	0.8%	10.9	0.8%	11.3	0.8%	
보건	7.9	1.1%	11.9	1.3%	18.5	1.5%	27.8	2.1%	34.2	2.5%	
사회복지	189.0	25.9%	290.3	32.2%	395.4	31.8%	431.9	32.4%	420.9	30.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0	4.0%	39.1	4.3%	75.5	6.1%	100.7	7.6%	153.8	11.1%	
예비비	0.3	0.0%	0.5	0.1%	0.6	0.0%	0.6	0.0%	0.6	0.0%	
통일·외교	4.3	0.6%	4.2	0.5%	4.7	0.4%	4.9	0.4%	5.1	0.4%	
일반·지방행정	313.3	43.0%	332.5	36.8%	471.5	37.9%	471.6	35.4%	460.9	33.2%	
통신	7.8	1.1%	8.1	0.9%	10.3	0.8%	11.3	0.8%	13.0	0.9%	
환경	8.3	1.1%	11.2	1.2%	15.2	1.2%	16.3	1.2%	17.4	1.3%	
총합계	728.3	100.0%	902.6	100.0%	1,242.8	100.0%	1,333.3	100.0%	1,389.1	100.0%	

주 : 2010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2010년 일반·공공행정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 통일·외교 예산은 2015년 외교·통일 예산을 반영함.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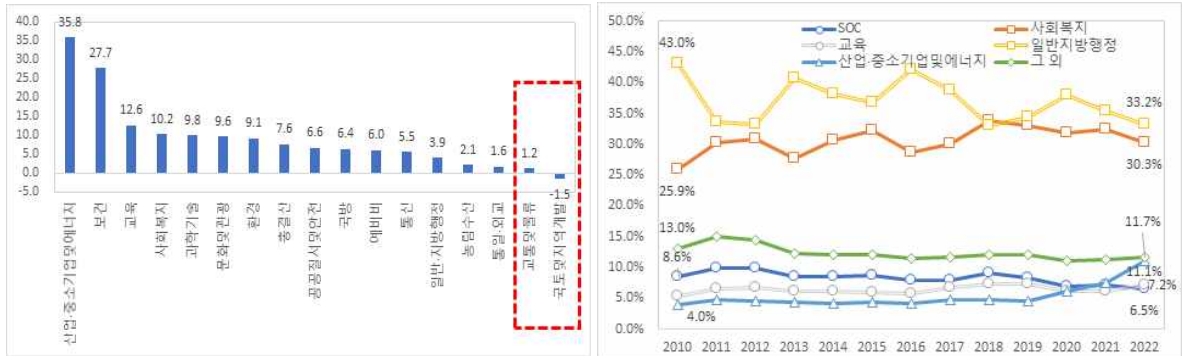
❖ 총결산액은 연평균(2011~2022) 7.6% 증가한 것에 반해 SOC 결산액은 매년 비중 감소 및 증가율 둔화가 확인됨.

- SOC 결산액 중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은 매년 1.2% 증가에 그쳤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매년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결산액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사회복지, 교육 분야 결산액 비중은 지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SOC 및 그 외의 결산액 비중은 하락함.

- 2022년 총결산액 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7.1%p), 사회복지(4.4%p), 교육(1.7%p) 분야 결산액의 비중은 2010년 대비 상승한 반면, 일반지방행정(-9.8%p),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2.8%p) 등의 비중은 하락함.

〈그림 8〉 분야별 결산액 연평균 변동률(2010~2022) 〈그림 9〉 연도별 분야별 결산액 비중 추이(2010~2022)
(단위 : %)



주 : 연평균 증가율=(2022년 분야별 예산-2010년 분야별 예산)/2010년 분야별 예산×100/12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한편, SOC 결산액은 연평균(2011~2022) 0.4% 증가하며 2022년 46.4조원 수준인 가운데 비목별로는 전출금 등이 SOC 결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SOC 결산 비목 중 2022년 기준 전출금 등(39.1%), 일반출연금(12.2%), 건설비(11.9%), 자치단체 이전(10.6%)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10〉 비목별 SOC 결산액 추이(2010~2022)

(단위 : 억원, %)

지출목	2010		2015		2020		2021		2022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SOC 결산	441,586	100.0%	484,337	100.0%	457,062	100.0%	521,910	100.0%	464,528	100.0%	
시설사업비	건설보상비	19,049	4.3%	24,705	5.1%	8,546	1.9%	10,257	2.0%	13,867	3.0%
	건설비	87,637	19.8%	62,951	13.0%	57,181	12.5%	58,550	11.2%	55,136	11.9%
	합계	106,686	24.1%	87,656	18.1%	65,727	14.4%	68,807	13.2%	69,003	14.9%
시설사업비 외	334,900	75.9%	396,681	81.9%	391,335	85.6%	453,103	86.8%	395,525	85.1%	

주 : 2017년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 출연금은 일반출연금으로, 2018년 토지매입비는 건설보상비로 비목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함.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SOC 결산액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사업비는 매년 감소 및 비중 하락이 나타남.

- SOC 결산액 중 보전금(배상금, 포상금 등), 해외이전비(해외경상이전, 국제부담금, 해외자본이전), 예비비 및 기타는 15% 넘게 증가한 반면, 건설비는 3.1%, 건설보상비는 2.3%가 매년 감소함.

❖ **비목별 SOC 결산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SOC 결산에서 시설사업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 비중은 2010년 24.2%에서 2022년 14.9%로 하락함.
- 반면, 같은 기간 시설사업비 외의 비중은 출자금(+4.0%p),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비¹⁰⁾(+2.5%p), 민간이전(+2.2%p) 등을 중심으로 비중이 상승함.

〈그림 10〉 SOC 결산 비목별 연평균 변동률(2010~2022) 〈그림 11〉 SOC 결산 시설사업비 비중 추이(2010~2022)



주 : 연평균 증가율=(2022년 비목별 예산-2017년 비목별 예산)/2017년 분야별 예산×100/12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총결산액을 기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비목들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비가 246.8조원, 1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그다음으로 상환지출(15.7%), 자치단체이전(15.6%), 민간이전(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사업비(건설비 1.0%, 건설보상비 0.2%)는 1.2% 수준임.

〈표 11〉 비목별 총결산액 추이(2010~2022)

(단위 : 억원, %)

지출목	2010		2015		2020		2021		2022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총결산	7,282,860	100.0%	9,026,309	100.0%	12,427,719	100.0%	13,333,098	100.0%	13,890,966	100.0%	
시설사업비	건설보상비	30,870	0.4%	37,823	0.4%	15,053	0.1%	17,565	0.1%	23,163	0.2%
	건설비	143,442	2.0%	133,703	1.5%	130,739	1.1%	135,927	1.0%	135,075	1.0%
	합계	174,312	2.4%	171,526	1.9%	145,792	1.2%	153,492	1.1%	158,238	1.2%
시설사업비 외	7,108,548	97.6%	8,854,783	98.1%	12,281,927	98.8%	13,179,606	98.9%	13,732,728	98.8%	

주 : 2017년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 출연금은 일반출연금으로, 2018년 토지매입비는 건설보상비로 비목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함.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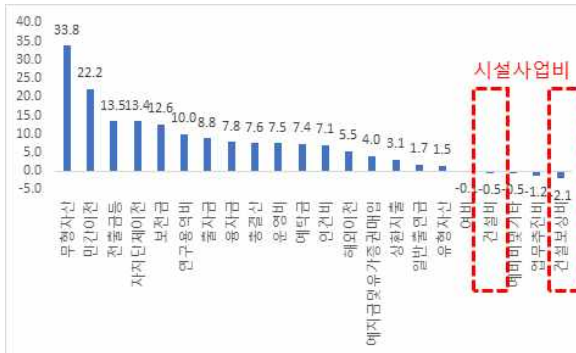
10) 한국은행 예치금,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기타민간예치금, 국채매입, 공채매입, 지방채매입, 기타 유가증권매입, 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세목으로 구성됨.

❖ **총결산액에서 시설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으며, 비중 역시 지속 하락함.**

- 시설사업비는 2010년 17.4조원에서 2022년 15.8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같은 기간 총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이전비, 자치단체이전비는 상승한 반면, 건설비는 1.0%p, 건설보상비는 0.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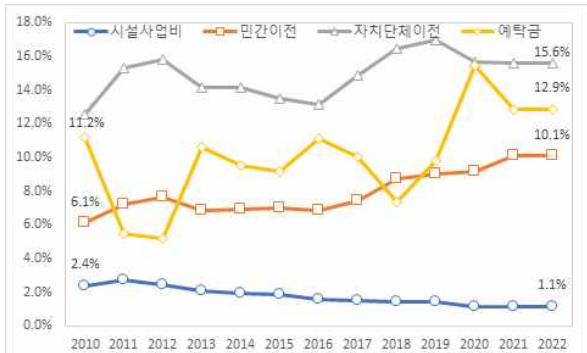
〈그림 12〉 총결산 비목별 연평균 변동률(2010~2022)

(단위 : %)



〈그림 13〉 총결산 비목별 비중 추이(2010~2022)

(단위 : %)



주 : 연평균 증가율=(2022년 비목별 예산-2010년 비목별 예산)/2010년 분야별 예산×100/12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3) 불용액

❖ **2010~2022년 기간 동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불용액은 연평균 28.3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SOC 분야 불용액은 1.2조원에 이르고 있음.**

-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은 서서히 감소하다 2021년(39.9조원)과 2022년(40.7조원) 크게 증가함.
- SOC 분야 불용액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1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2022년 0.8조원 수준을 보임. SOC 불용액 중 시설사업비 불용액은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0.4조원 수준임.
- 시설사업비 불용액은 연평균 0.9조원 수준을 보임.

〈표 12〉 연도별 불용액 추이(2010~2021)

(단위 : 억원)

연도	총불용액	SOC 분야 불용액		시설사업비 불용액
			시설사업비 불용액	
2010	305,535	13,114	5,357	9,555
2011	211,957	20,933	7,034	15,006
2012	164,712	7,174	1,344	9,798
2013	374,848	39,440	10,164	19,116
2014	303,742	17,809	5,787	11,880
2015	244,523	10,230	4,312	9,887
2016	278,551	10,695	3,178	7,942
2017	235,602	4,535	1,945	7,304
2018	282,736	3,442	1,894	6,173
2019	204,933	6,516	1,031	3,935
2020	263,838	2,796	688	3,360
2021	398,674	6,949	2,483	6,964
2022	406,844	8,074	2,570	8,349
총합계	3,676,495	151,707	47,787	119,270
연평균	282,807	11,670	3,676	9,175

주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임.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총결산액에서 2010~2022년 연평균 불용액은 28.3조원인 가운데,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농림수산, 통일·외교 순으로 많이 발생함.

- 분야별 연평균 불용액은 일반·지방행정 11.6조원(41.2%), 사회복지 5.6조원(19.8%), 산업·중소기업 2.0조원(7.1%), 농림수산 1.6조원(5.8%), 통일·외교 1.3조원(4.7%)이 발생함.
- SOC 분야는 교통 및 물류 0.9조원(3.3%), 국토 및 지역개발 0.2조원(0.8%)으로 1.2조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불용액의 4.1%를 차지함.

〈표 13〉 연도별 분야별 불용액 추이(2010~2021)

(단위 : 억원)

분야명	2010	2015	2020	2021	2022	총계 (2010~2022)	연평균	
공공질서 및 안전	3,287	6,142	4,352	7,406	4,467	61,920	4,763	
과학기술	138	577	632	987	1,080	10,467	805	
교육	42,803	16,941	1,351	3,187	1,655	89,359	6,874	
SOC	교통 및 물류	10,815	5,427	2,092	5,559	4,505	121,649	9,358
	국토 및 지역개발	2,300	4,803	704	1,389	3,568	30,057	2,312
국방	3,179	12,285	9,332	12,498	12,538	127,452	9,804	
농림수산	13,595	22,747	3,422	4,299	7,601	212,128	16,318	
문화 및 관광	2,999	4,526	2,936	4,009	2,697	37,352	2,873	
보건	1,599	1,509	2,413	2,089	12,372	32,582	2,506	
사회복지	43,287	56,617	110,235	117,595	60,570	728,707	56,05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495	19,206	26,506	43,512	27,611	261,567	20,121	
예비비	3,643	14,791	608	804	6,125	102,334	7,872	
일반·지방행정	145,963	46,597	71,804	168,286	232,621	1,513,005	116,385	
통신	2,056	16,324	10,820	7,297	8,910	136,887	10,530	
통일·외교	15,157	14,114	14,818	15,210	14,687	172,591	13,276	
환경	218	1,916	1,813	4,545	5,836	38,437	2,957	
총합계	305,535	244,523	263,838	398,674	406,844	3,676,495	282,807	

주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임.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총결산액에서 비목별 불용액은 상환지출, 예탁금, 민간이전, 용자금, 전출금 등 순으로 많이 발생함.

- 연평균 상환지출은 8.0조원(28.2%), 예탁금 5.1조원(18.1%), 민간이전 3.3조원(11.8%), 용자금 2.0조원(7.2%), 전출금 등 2.0조원(7.2%)의 불용액이 발생함.
- 시설사업비는 전체 불용액의 3.2%, 0.9조원 수준으로 건설비 0.8조원(2.8%), 건설보상비 0.1조원(0.4%)의 불용액이 발생함.

〈표 14〉 연도별 비목별 불용액 추이(2010~2021)

(단위 : 억원)

비목명		2010	2015	2020	2021	2022	총계 (2010~2021)	연평균
시설 사업비	건설보상비	2,641	1,054	119	364	693	14,927	1,148
	건설비	6,914	8,833	3,241	6,600	7,656	104,343	8,026
무형자산		48	63	49	536	330	1,567	121
민간이전		66,877	36,934	49,545	34,674	34,510	433,941	33,380
보전금		447	2,171	1,111	2,964	23,790	56,462	4,343
상환지출		76,364	39,337	96,006	114,454	109,963	1,037,178	79,783
안보비		0	0	712	459	528	2,192	169
업무추진비		55	74	216	252	84	1,581	122
여비		389	404	1,814	2,102	701	8,740	672
연구개발출연금		0	0	787	941	1,859	7,291	561
연구용역비		489	854	704	958	1,487	11,457	881
예비비 및 기타		20,196	21,545	10,250	20,185	29,066	234,346	18,027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0	31	0	0	0	1,988	153
예탁금		2,100	36,964	40,071	114,883	117,692	663,902	51,069
운영비		5,707	23,476	8,236	8,684	7,504	104,299	8,023
유형자산		63,694	3,186	1,351	1,970	2,502	127,474	9,806
융자금		28,928	31,669	23,516	48,203	6,018	266,373	20,490
인건비		7,343	9,761	6,181	11,094	7,834	88,611	6,816
일반출연금		4,615	1,906	536	1,598	1,365	36,926	2,840
자치단체이전		3,721	9,623	3,519	8,659	40,275	128,306	9,870
전출금 등		9,516	13,745	9,190	9,743	9,205	264,861	20,374
지분취득비		0	0	20	1	1	24	2
직무수행경비		235	358	152	222	210	2,834	218
출자금		4,548	1,409	2,668	6,620	1,703	54,953	4,227
특수활동비		557	237	232	184	147	4,035	310
해외이전		152	890	3,613	2,325	1,722	17,882	1,376
총합계		305,535	244,523	263,838	398,674	406,844	3,676,495	282,807

주 : 1) 2017년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 출연금은 일반출연금으로, 2018년 토지매입비는 건설보상비로 비목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임.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2010~2022년 부처별 시설사업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행안부, 기재부 등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동 기간 연간 9,174억원이 불용 처리됨.

- 연평균 국토부는 2,202억원, 국방부는 1,864억원, 해수부는 975억원, 행안부는 610억원, 기재부는 564억원이 불용 처리됨.
 - 국토부는 2022년 신공항건설사업(602.4억원), 광역철도건설지원(794.4억원),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161.5억원) 등에서 절대공기부족,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함.
 - 국방부는 2022년 병영기본시설(224.6억원), 일반시설개선(618.9억원), 시설유지운영(243.0억원), 군시설이전사업(685.2억원) 등의 사업에서 건설비 불용액이 발생함.
 - 기획재정부는 2022년 평택(5.1억원), 광주 중부(30.0억원), 순천(10.7억원), 서울 용산(9.0억원) 등의 경찰청 청사 신축 사업(125.9억원)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함.

- 한편, 시설사업비의 총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전체 시설사업비의 총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2010~2022년 기간 동안의 시설사업비 총불용액/총예산액 비율은 질병관리청 51.9%, 통일부 44.2%, 행정안전부 2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2년 시설사업비 불용액/예산액 비율은 국회 62.2%, 통일부 51.7%, 질병관리청 49.1%, 조달청 33.5%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5〉 부처별 시설사업비 불용액 추이(201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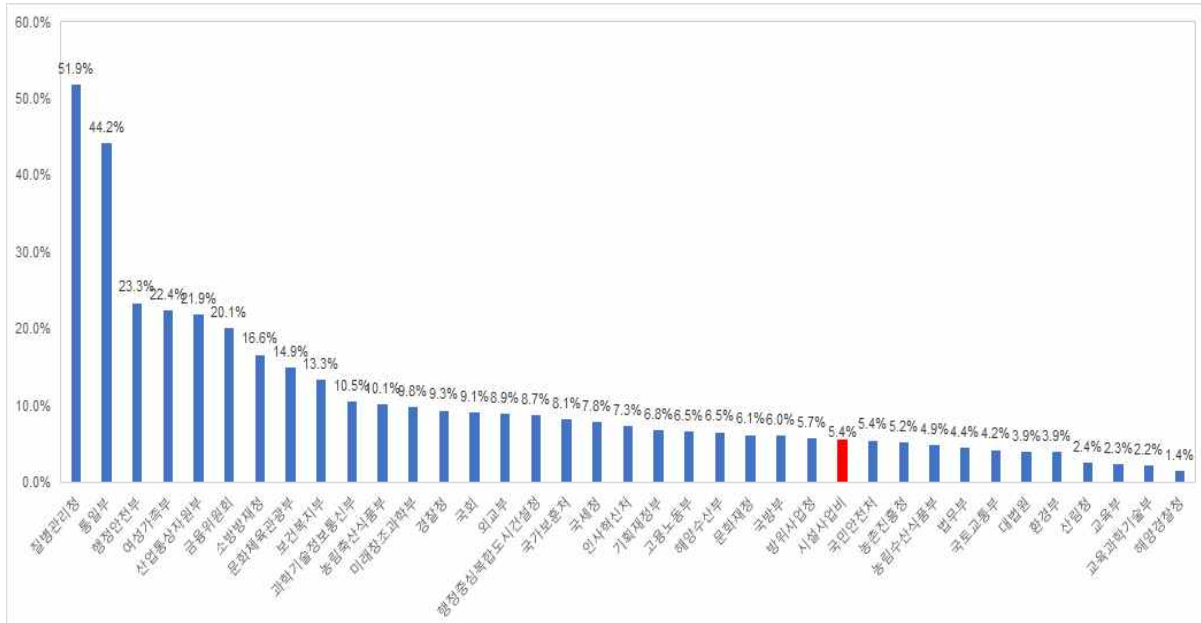
(단위 : 억원)

부처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합계	연평균
국도교통부	0	0	0	7,969	3,730	2,168	1,690	710	1,145	534	333	1,903	1,837	22,019	2,202
국방부	1,281	3,406	3,811	2,114	1,961	975	1,369	1,489	1,298	1,111	920	1,916	2,586	24,237	1,864
해양수산부	0	0	0	1,913	1,173	1,191	1,567	997	762	531	411	579	622	9,746	975
행정안전부	1,421	2,109	1,377	0	0	0	0	517	119	100	296	118	40	6,096	610
기획재정부	1	1	315	623	482	1,026	1,328	1,222	858	335	127	441	574	7,332	56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885	91	153	595	1,008	1,015	106	261	80	29	7	48	113	5,392	415
방위사업청	74	177	230	789	374	709	395	614	295	245	251	240	693	5,086	391
문화체육관광부	203	193	283	416	1,183	381	360	147	75	116	151	204	261	3,974	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0	0	0	0	0	0	137	110	343	218	204	133	1,145	191
경찰청	21	787	492	591	23	4	13	7	10	10	8	27	22	2,015	155
보건복지부	466	319	30	171	71	77	94	251	94	35	40	46	23	1,717	132
교육부	0	0	0	251	96	174	72	35	124	80	55	209	146	1,242	124
산업통상자원부	0	0	0	647	475	61	13	3	3	7	5	14	11	1,240	124
환경부	49	24	104	171	60	107	61	76	245	81	68	213	248	1,507	116
통일부	10	3	3	7	301	343	333	112	102	76	65	73	78	1,504	116
농촌진흥청	2	83	22	10	66	863	32	35	1	25	14	72	123	1,347	104
산림청	83	23	43	206	183	164	90	100	130	69	62	74	104	1,331	102
인사혁신처	0	0	0	0	197	136	91	151	261	4	1	5	46	892	99
농림축산식품부	0	0	0	392	7	107	19	28	94	31	19	13	68	778	78
법무부	48	73	288	29	39	9	8	9	12	18	20	75	117	745	57
문화재청	28	13	12	102	65	29	41	55	41	19	74	68	53	601	46
질병관리청	0	0	0	0	0	0	0	0	0	0	15	60	31	107	36
국세청	7	86	150	146	6	7	2	1	0	1	2	2	1	412	32
금융위원회	64	14	242	20	33	0	0	0	0	0	1	0	0	375	29
국가보훈처	3	4	12	15	6	9	24	39	88	33	31	25	54	342	26
여성가족부	4	0	11	3	2	24	6	181	68	4	4	6	10	325	25
대법원	30	37	9	53	14	30	19	2	16	16	8	47	31	311	24
해양경찰청	8	26	7	160	0	0	0	6	18	18	16	7	3	269	22
행정자치부	0	0	0	0	44	13	28	0	0	0	0	0	0	84	21
국회	2	2	5	4	1	3	9	13	12	10	17	28	165	272	21
외교부	0	0	0	6	7	14	8	7	2	8	24	44	66	185	19
고용노동부	1	12	9	3	2	9	7	15	44	2	4	120	3	231	18
대통령실	18	25	23	0	0	0	0	0	0	0	0	0	0	66	17
중소벤처기업부	0	0	0	0	0	0	0	0	14	11	43	15	7	90	15

주 : 연평균 불용액은 불용액이 발생한 기간의 평균값이며, 연평균 10억 이하의 부처는 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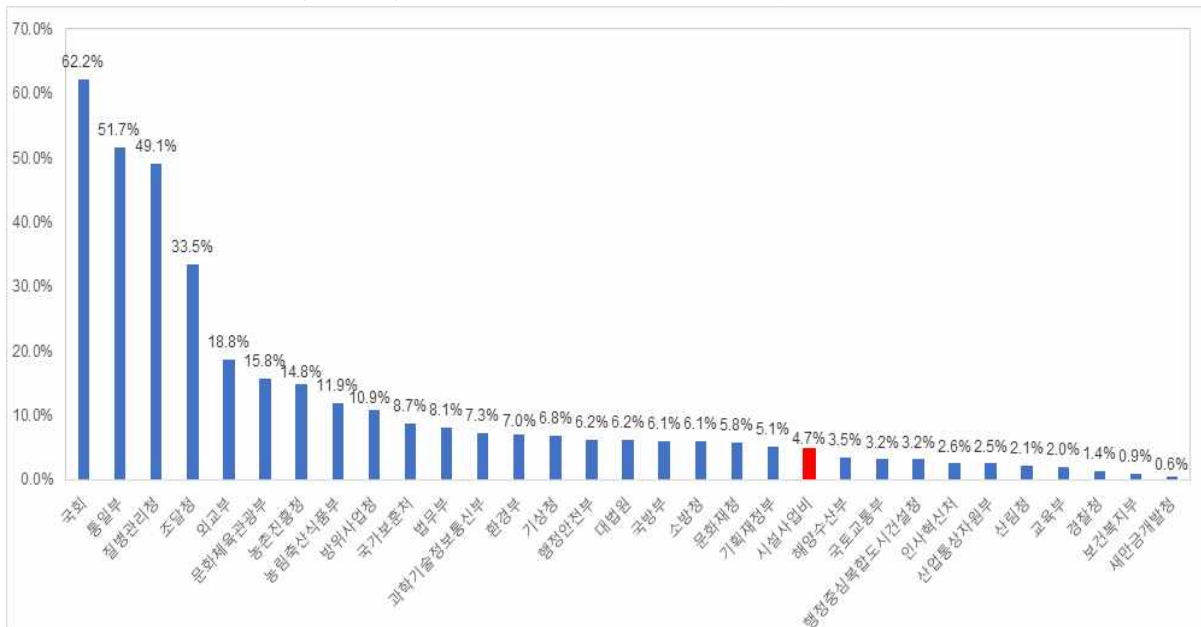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그림 14〉 부처별 2010~2022년 시설사업비 총불용액/총예산액 비율



주 : 불용액 100억원 미만 부처는 제외함. 불용액을 세출예산액(당초지출계획액)으로 나눈 비율임.

〈그림 15〉 부처별 2022년 시설사업비 불용액/예산액 비율



주 : 불용액 10억원 미만 부처는 제외함. 불용액을 세출예산액(당초지출계획액)으로 나눈 비율임.

2. 지방정부

(1) 예산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액(최종예산 총계기준)은 연평균(2010~2022) 7.7%씩 증가하여, 2022년 482.6조원에 이르고 있음.

- 2022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액이 총예산의 32.8%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SOC 분야(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합계액)의 예산액이 총예산의 14.2%를 점유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16〉 분야별 예산액 추이 (2010~2022)

(단위 : 조원, %)

세부분야	2010		2015		2020		2021		2022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23.7	12.0%	35.0	12.9%	41.0	9.6%	47.9	10.5%	54.9	11.4%	
공공질서 및 안전	3.8	1.9%	5.0	1.8%	15.6	3.6%	19.1	4.2%	15.6	3.2%	
교육	8.6	4.4%	11.8	4.4%	15.2	3.5%	16.7	3.6%	17.9	3.7%	
문화 및 관광	10.1	5.1%	12.5	4.6%	16.4	3.8%	17.7	3.9%	20.0	4.2%	
환경보호	20.4	10.3%	25.1	9.3%	36.3	8.5%	39.5	8.6%	40.3	8.4%	
사회복지	44.8	22.7%	76.8	28.4%	156.5	36.5%	158.6	34.6%	158.4	32.8%	
보건	3.2	1.6%	4.5	1.7%	7.4	1.7%	8.2	1.8%	11.4	2.4%	
농림해양수산	15.8	8.0%	19.4	7.2%	28.8	6.7%	30.3	6.6%	32.9	6.8%	
산업중소기업	4.6	2.3%	5.6	2.1%	14.9	3.5%	14.3	3.1%	15.7	3.2%	
SOC	수송 및 교통	22.4	11.3%	23.1	8.5%	28.4	6.6%	32.9	7.2%	37.6	7.8%
	국토 및 지역개발	18.7	9.5%	20.3	7.5%	28.1	6.6%	30.6	6.7%	31.0	6.4%
과학기술	0.5	0.2%	0.6	0.2%	0.4	0.1%	0.4	0.1%	0.5	0.1%	
예비비	1.9	1.0%	5.4	2.0%	5.4	1.2%	5.2	1.1%	6.9	1.4%	
기타	19.4	9.8%	25.4	9.4%	34.5	8.0%	36.4	7.9%	39.5	8.2%	
총합계	197.9	100%	270.4	100%	428.7	100%	457.7	100%	48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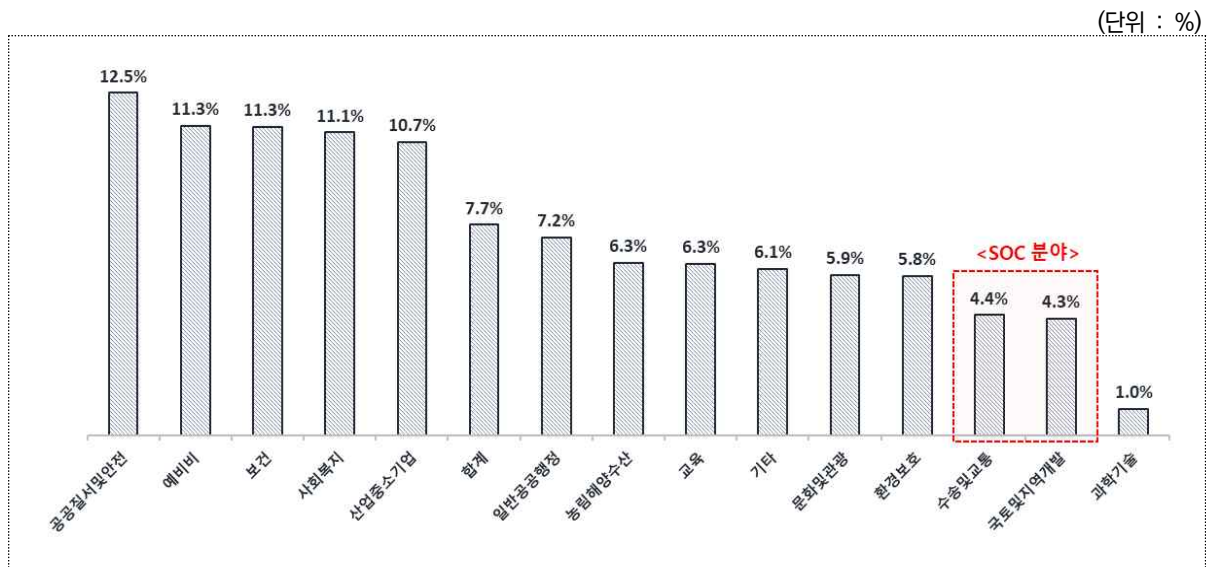
주 : 이상의 수치는 광역지자체 본청 및 관내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며(기금은 제외), 최종예산 총계기준으로 도출되었음.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예산액의 분야별 연평균(2010~2022) 증가율을 살펴보면(예비비 제외), SOC 분야의 증가율은 타 분야의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액은 연평균(2010~2022) 7.7% 증가하는 데 반해, SOC 예산액의 연평균(2010~2022) 증가율은 4.4%로서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구체적으로, SOC 예산 중 ①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매년 4.4% 증가하고, ②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매년 4.3% 증가하는 데 그침.
- 연평균 증가율이 뚜렷하게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12.5%(3.8조→15.6조), △보건 11.3%(3.2조→11.4조), △사회복지 11.1%(44.8조→158.4조), △산업중소기업 10.7%(4.6조→15.7조) 순임.
- 중앙정부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하였을 때, SOC 분야는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그림 16> 분야별 예산액의 연평균 증가율(201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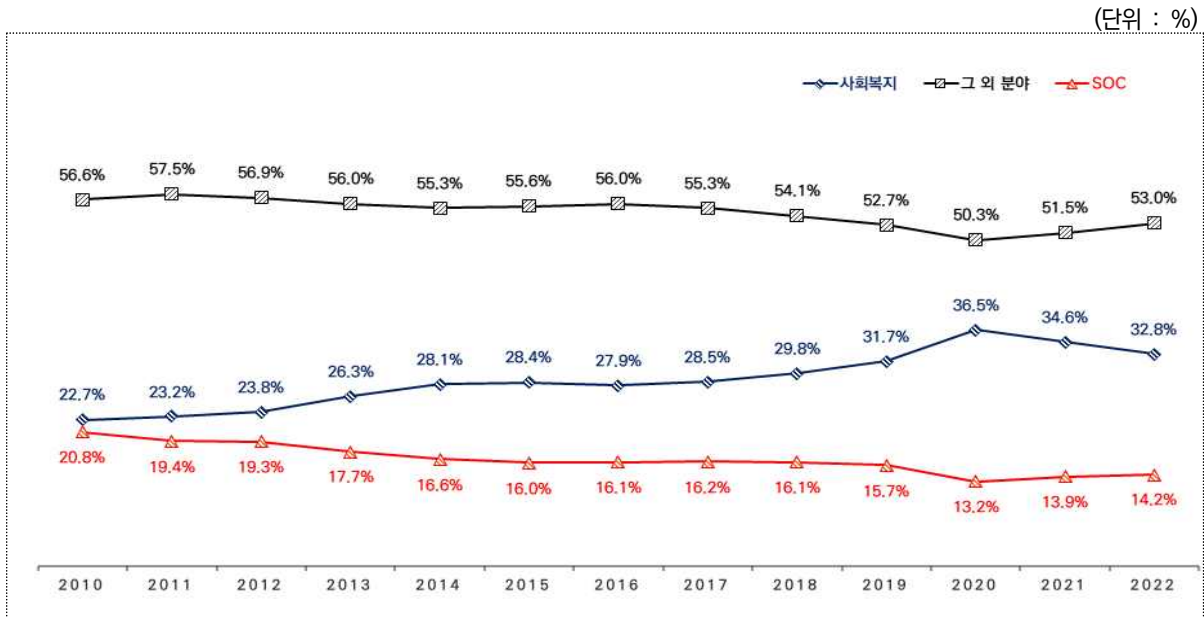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또한, 분야별 예산액 비중의 연도별 추세를(2010~2022)를 살펴보면, SOC 분야의 추세와 타 분야의 추세가 뚜렷하게 대비됨을 알 수 있음.

- SOC(20.8%→14.2%) 분야는 일반공공행정(12.0%→11.4%), 교육(4.4%→3.7%), 문화 및 관광(5.1%→4.2%), 농림해양수산(8.0%→6.8%), 과학기술(0.2%→0.1%) 분야 등 하락 추세를 보이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그 추세가 매우 급격함.
- 한편, 사회복지(22.7%→32.8%) 분야는 산업중소기업(2.3%→3.2%), 공공질서 및 안전(1.9%→3.2%), 보건(1.6%→2.4%) 분야와 함께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임.

〈그림 17〉 분야별 예산액 비중의 연도별 추세(2010~2022)



주 : 그 외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와 SOC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모두 합계한 분야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SOC 예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시설사업 예산(통계목코드: 401)은 연평균(2010~2022) 4.26%씩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냄.

- 시설사업 예산 규모는 2010년 40.9조원 수준에서 2022년 64.7조원 수준으로 약 58.2% 증가.
- 시설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0.6% 수준에서 2022년 13.4% 수준으로 하락.

〈표 17〉 시설사업 예산액 추이(2010~2022)

(단위 : 조원, %)

세부분야	2010	2015		2020		2021		2022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시설사업 예산액	40.9	41.4	54.5	60.8	64.7	20.6%	15.3%	12.7%	13.3%	13.4%
전체 예산액	197.9	270.4	428.7	457.7	482.6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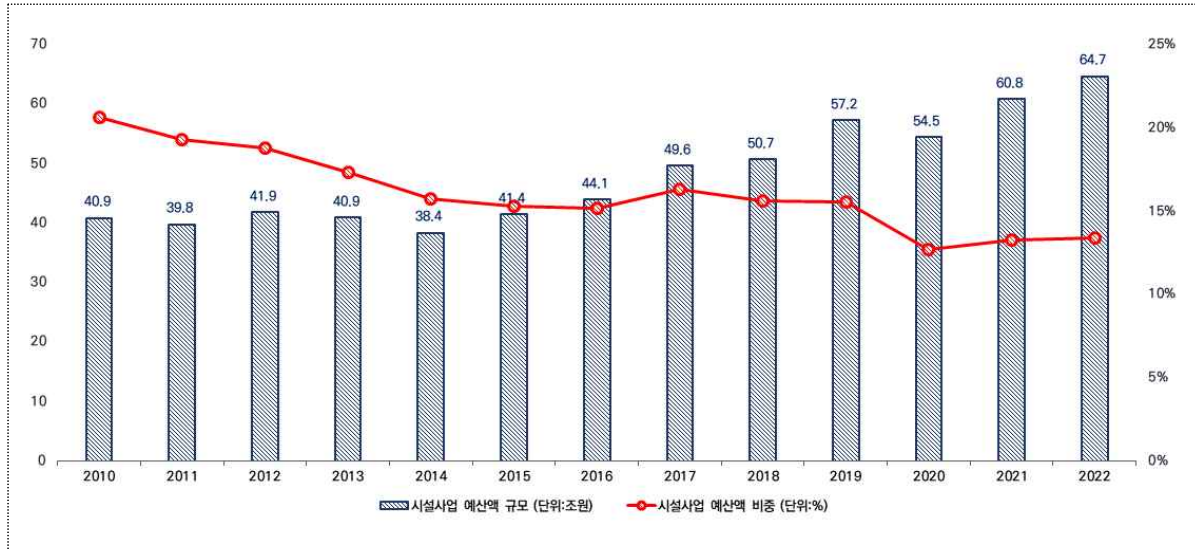
주 : 1) 이상의 수치는 광역지자체 본청 및 관내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며(기금은 제외), 최종예산 총계기준으로 도출되었음.

2) 시설사업 예산액은 지방재정 통계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401)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그림 18> 시설사업 예산액 규모 및 비중 추이(2010~2022)

(단위 : 조원,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2) 결산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결산액(최종예산 총계기준)은 연평균(2010년~2021년) 7.97%씩 증가하여 2021년 433.5조원에 이르고 있음.

- 2021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의 결산액이 전체 결산액의 35.8%를 점유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SOC 분야의 결산액이 전체 결산액의 13.6%를 점유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18〉 분야별 결산액 추이 (2010~2021)

(단위 : 조원, %)

세부분야	2010		2015		2020		2021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일반공공행정	22.4	12.0%	31.0	12.6%	40.4	9.9%	46.6	10.7%	
공공질서 및 안전	3.7	2.0%	4.4	1.8%	15.6	3.8%	18.2	4.2%	
교육	8.4	4.5%	12.0	4.9%	14.7	3.6%	16.4	3.8%	
문화및관광	9.8	5.2%	11.5	4.7%	15.6	3.8%	16.3	3.7%	
환경보호	18.0	9.6%	21.3	8.7%	32.4	7.9%	35.4	8.2%	
사회복지	44.0	23.6%	74.9	30.6%	153.7	37.6%	155.4	35.8%	
보건	3.1	1.7%	4.3	1.8%	7.0	1.7%	7.8	1.8%	
농림해양수산	14.9	8.0%	17.6	7.2%	27.8	6.8%	29.3	6.7%	
산업중소기업	4.5	2.4%	5.0	2.0%	14.2	3.5%	14.0	3.2%	
SOC	수송 및 교통	21.2	11.4%	20.9	8.5%	27.7	6.8%	31.0	7.2%
	국토 및 지역개발	17.0	9.1%	16.9	6.9%	26.1	6.4%	27.9	6.4%
과학기술	0.3	0.2%	0.4	0.2%	0.4	0.1%	0.4	0.1%	
예비비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19.4	10.4%	24.9	10.2%	33.1	8.1%	34.9	8.0%	
총합계	186.5	100%	245.1	100%	408.6	100%	43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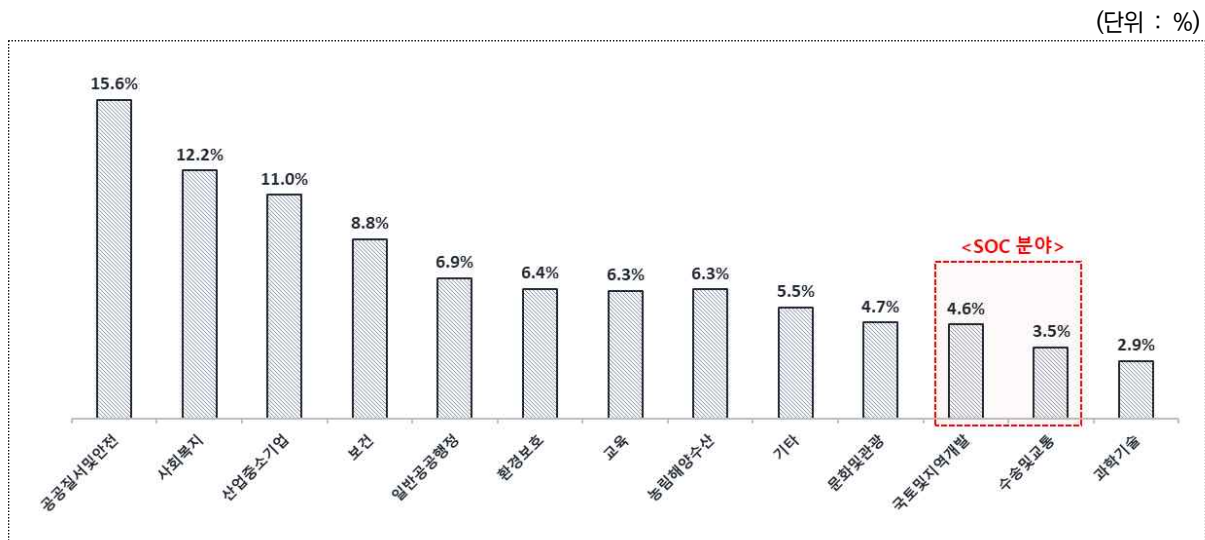
주 : 이상의 수치는 광역지자체 분청 및 관내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며(기금은 제외), 최종예산 총계기준으로 도출되었음.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결산액의 분야별 연평균(2010년~2021년) 증가율을 살펴보면(예비비 제외), 예산액에 서와 마찬가지로 SOC 분야의 증가율이 타 분야의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결산액은 연평균(2010년~2021년) 7.97%씩 증가하는 데 반해, SOC 결산액의 연평균(2010년~2021년) 증가율은 4.01%로서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구체적으로, SOC 결산액 중 ①수송 및 교통 분야 결산액은 매년 3.5% 증가하고, ②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결산액은 매년 4.6% 증가하는 데 그침.
- 연평균 증가율이 뚜렷하게 높은 분야를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15.6%(3.7조→18.2조), △사회복지 12.2%(44.0조→155.4조), △산업중소기업 11.0%(4.5조→14.0조), △보건 8.8%(3.1조→7.8조) 순임.
- 총예산액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하면, SOC 분야 결산액이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그림 19〉 분야별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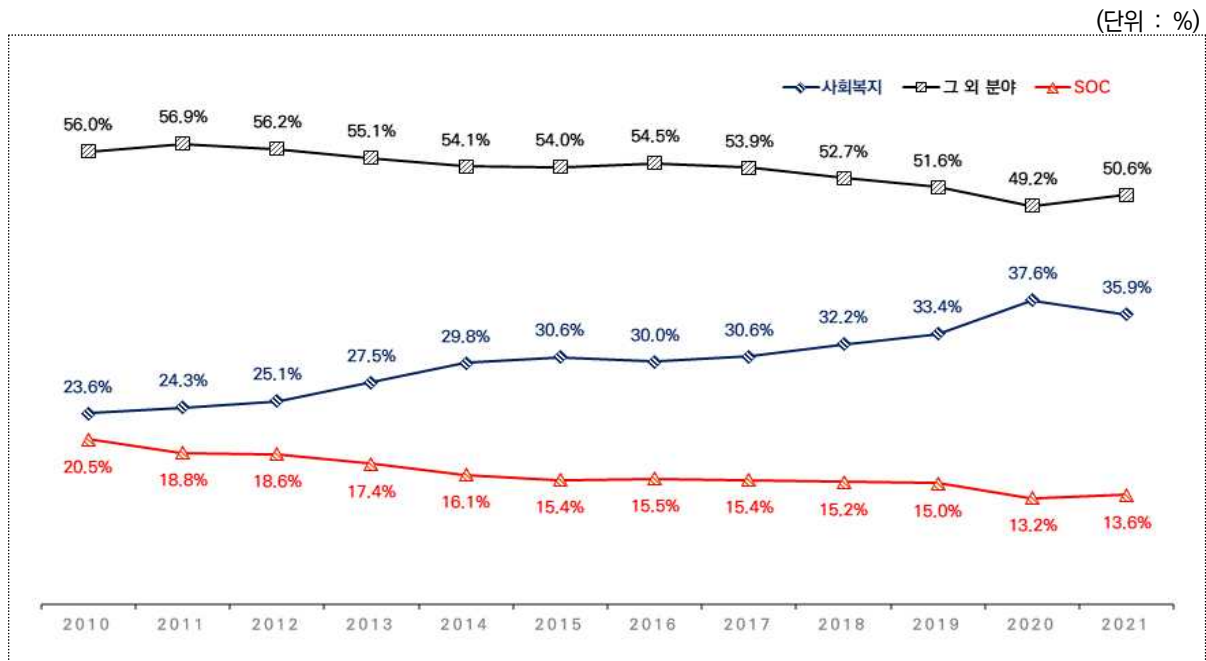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분야별 결산액 비중의 연도별 추세를(2010년~2021년)를 살펴보면, SOC 분야의 추세와 타 분야의 추세가 뚜렷하게 대비됨을 알 수 있음.**

- SOC(20.5%→13.6%) 분야는 일반공공행정(12.0%→10.7%), 교육(4.5%→3.8%), 문화 및 관광(5.1%→3.7%), 농림해양수산(8.0%→6.7%), 과학기술(0.2%→0.1%) 분야를 비롯해 하락 추세를 보이는 타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하락 추세가 매우 급격함.
- 한편, 사회복지(23.6%→35.9%) 분야는 산업중소기업(2.4%→3.2%), 공공질서 및 안전(2.0%→4.2%) 분야와 함께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임.

〈그림 20〉 분야별 결산액 비중의 연도별 추세(2010~2021)



주 : 그 외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와 SOC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모두를 합계한 분야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한편, SOC 결산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시설사업 결산(통계목코드: 401)은 연평균(2010년~2021년) 3.01%씩 증가하였으나, 전체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시설사업 결산액 규모는 2010년 39.4조원 수준에서 2021년 54.6조원 수준으로 약 38.6% 증가.
- 시설사업 결산액 비중은 2010년 21.1% 수준에서 2021년 12.6% 수준으로 지속 하락.

〈표 19〉 시설사업 결산액 추이(2010~2021)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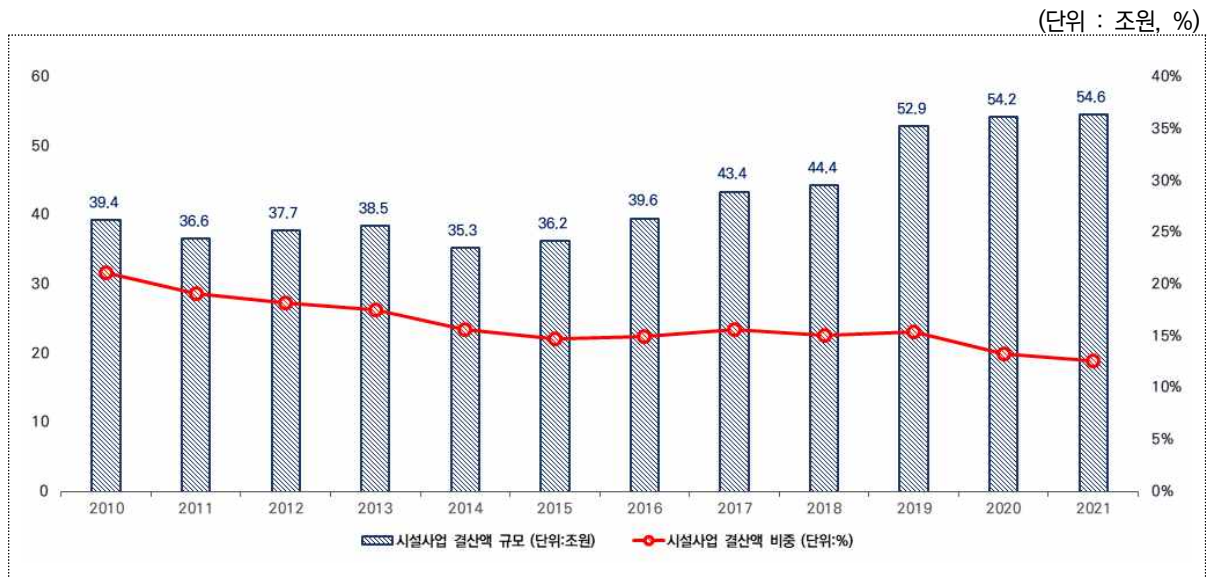
세부분야	2010		2015		2020		2021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시설사업 결산액	39.4	21.1%	36.2	15.0%	54.2	13.3%	54.6	12.6%
전체 결산액	186.5	100%	245.1	100%	408.6	100%	433.5	100%

주 : 1) 이상의 수치는 광역지자체 본청 및 관내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며(기금은 제외), 최종 예산 총계기준으로 도출되었음.

2) 시설사업 결산액은 지방재정 통계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401)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그림 21〉 시설사업 결산액 규모 및 비중 추이 (2010~2021)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3) 예·결산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결산 차액을 살펴보면, SOC 분야는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 등과 함께 예·결산 차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¹¹⁾

- 2020년 기준, SOC 분야는 전체 예·결산 차액의 13.3%를 점유하여, 환경보호(19.3%) 및 사회복지(13.7%)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결산 차액을 야기함.
- 2021년 기준, SOC 분야는 전체 예·결산 차액의 18.9%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예·결산 차액을 야기함.

〈표 20〉 분야별 예·결산 차액 및 비중

(단위 : 조원, %)

세부분야	2010		2015		2020		2021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1.32	11.6%	-3.97	15.7%	-0.60	3.0%	-1.34	5.5%	
공공질서 및 안전	-0.09	0.8%	-0.63	2.5%	0.03	-0.2%	-0.89	3.7%	
교육	-0.27	2.3%	0.25	-1.0%	-0.56	2.8%	-0.35	1.5%	
문화및관광	-0.32	2.8%	-0.99	3.9%	-0.80	4.0%	-1.41	5.8%	
환경보호	-2.44	21.4%	-3.84	15.2%	-3.89	19.3%	-4.12	17.0%	
사회복지	-0.83	7.3%	-1.81	7.2%	-2.75	13.7%	-3.16	13.1%	
보건	-0.07	0.6%	-0.18	0.7%	-0.34	1.7%	-0.38	1.6%	
농림해양수산	-0.88	7.8%	-1.83	7.2%	-0.97	4.8%	-1.04	4.3%	
산업중소기업	-0.15	1.3%	-0.64	2.5%	-0.72	3.6%	-0.26	1.1%	
SOC	수송 및 교통	-1.18	10.3%	-2.21	8.7%	-0.67	3.3%	-1.88	7.8%
	국토 및 지역개발	-1.77	15.5%	-3.42	13.5%	-2.02	10.0%	-2.69	11.1%
과학기술	-0.15	1.3%	-0.20	0.8%	-0.01	0.1%	0.00	0.0%	
예비비	-1.90	16.7%	-5.39	21.3%	-5.35	26.6%	-5.20	21.5%	
기타	0.00	0.0%	-0.42	1.7%	-1.42	7.1%	-1.48	6.1%	
총합계	-11.40	100.0%	-25.31	100.0%	-20.14	100.0%	-24.19	100.0%	

주 : 1) 이상의 수치는 광역지자체 본청 및 관내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며(기금은 제외), 최종 예산 총계기준으로 도출되었음.

2) 차액은 결산액에서 예산액을 뺀 값을 의미하고, 비중은 개별 분야의 차이 규모를 전체 차액 규모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11) 예비비는 예산성립 후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임. 즉, 예비비는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계정으로, 나머지 세부분야와 동일선 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려워 예·결산 차액 분석에서 제외함.

❖ SOC 분야 예·결산 차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다수 지역에서 예산 규모보다 더 작은 규모의 결산이 지출되었음(<표 21> 참조).

- 단, 음영으로 표기된 지역인 △대구(2020), △인천(2014), △울산(2010, 2019), △강원(2021), △충북(2010), △전북(2012), △전남(2010, 2011), △경북(2020)에서는 예산규모에 비해 더 큰 규모의 결산 지출이 이루어졌음.

<표 21> 지역별 SOC 분야 예·결산 차액 및 비율 (2010~2021)

(단위 :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2,984 -7.3%	-3,861 -9.7%	-4,565 -10.6%	-3,560 -8.5%	-4,119 -10.2%	-5,652 -13.0%	-5,738 -12.3%	-6,717 -13.6%	-7,832 -15.0%	-6,338 -11.0%	-2,682 -4.8%	-4,597 -7.2%
서울	-1,057 -14.4%	-491 -8.0%	-649 -10.1%	-501 -7.4%	-493 -7.1%	-728 -11.1%	-683 -9.4%	-659 -8.3%	-742 -8.4%	-1,200 -12.4%	-412 -4.5%	-646 -6.0%
부산	-170 -5.0%	-72 -2.4%	-109 -3.6%	-217 -6.8%	-239 -8.3%	-110 -3.3%	-174 -5.6%	-159 -5.3%	-169 -5.5%	-301 -9.4%	-272 -8.3%	-399 -10.0%
대구	-50 -2.9%	-76 -4.7%	-256 -14.5%	-222 -12.5%	-181 -11.4%	-167 -11.1%	-143 -8.4%	-116 -7.1%	-171 -9.9%	-266 -13.8%	64 3.1%	-210 -9.7%
인천	-253 -9.4%	-243 -9.7%	-305 -11.1%	-302 -11.1%	4 0.2%	-323 -12.3%	-581 -20.2%	-658 -21.5%	-747 -24.1%	-327 -10.2%	-543 -14.0%	-259 -6.0%
광주	-39 -5.6%	-99 -12.6%	-71 -9.2%	-43 -6.2%	-68 -9.6%	-131 -17.7%	-56 -7.0%	-168 -19.5%	-246 -24.1%	-113 -10.2%	-106 -8.0%	-216 -12.7%
대전	-147 -16.3%	-162 -17.3%	-200 -21.3%	-72 -8.1%	-178 -19.5%	-76 -8.9%	-111 -12.2%	-41 -3.8%	-167 -13.7%	-157 -12.8%	-18 -1.4%	-156 -11.7%
울산	37 5.5%	-127 -15.0%	-107 -12.0%	-103 -12.1%	-129 -15.5%	-99 -11.2%	-211 -19.1%	-20 -1.8%	-4 -0.5%	7 0.8%	-37 -3.9%	-108 -11.4%
세종	-	-	-	-52 -31.5%	-80 -19.8%	-98 -24.5%	-42 -8.3%	-107 -25.2%	-158 -33.4%	-129 -29.7%	-100 -23.5%	-55 -13.3%
경기	-452 -5.7%	-1,059 -13.3%	-981 -10.5%	-804 -10.5%	-1,114 -14.9%	-1,922 -19.8%	-1,459 -14.5%	-1,850 -17.0%	-2,406 -20.8%	-1,369 -11.4%	-613 -5.3%	-1,130 -8.5%
강원	-153 -8.2%	-79 -4.5%	-120 -6.2%	-235 -10.7%	-58 -3.1%	-237 -11.7%	-248 -10.2%	-318 -12.6%	-322 -13.1%	-469 -15.6%	-169 -5.8%	67 2.4%
충북	4 0.3%	-144 -10.4%	-184 -12.1%	-189 -12.4%	-136 -9.8%	-172 -12.2%	-141 -8.6%	-324 -17.3%	-169 -9.3%	-156 -6.7%	-112 -5.5%	-194 -8.5%
충남	-178 -8.7%	-291 -13.0%	-290 -12.7%	-108 -5.2%	-209 -10.7%	-253 -12.7%	-325 -15.1%	-423 -18.0%	-514 -19.7%	-56 -1.8%	-85 -3.0%	-347 -10.9%
전북	-80 -5.1%	-175 -9.6%	20 1.1%	-100 -5.3%	-110 -6.8%	-154 -9.0%	-86 -5.1%	-220 -12.2%	-234 -12.4%	-272 -11.6%	-12 -0.5%	-180 -7.0%
전남	159 6.3%	40 1.6%	-250 -8.8%	-48 -2.0%	-335 -12.5%	-362 -13.4%	-340 -11.2%	-427 -15.0%	-679 -21.2%	-389 -10.7%	-54 -1.7%	-254 -7.7%
경북	-311 -10.6%	-587 -19.7%	-602 -19.3%	-294 -9.7%	-465 -15.3%	-510 -14.4%	-697 -19.1%	-752 -19.5%	-726 -18.3%	-770 -16.6%	28 0.7%	-169 -3.8%
경남	-249 -8.7%	-224 -8.0%	-351 -11.4%	-217 -6.5%	-295 -10.5%	-291 -10.1%	-405 -12.3%	-402 -12.0%	-374 -10.5%	-368 -9.4%	-151 -3.6%	-311 -6.2%
제주	-44 -8.0%	-71 -12.6%	-86 -14.2%	-53 -9.5%	-36 -6.7%	-18 -3.2%	-35 -5.8%	-72 -8.5%	-1 -0.2%	-4 -0.4%	-91 -9.2%	-29 -2.8%

주 : 차액은 결산액에서 예산액을 뺀 값을 의미하고, 비율은 차이 규모를 예산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시설사업 예·결산 차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다수 지역에서 예산 규모보다 더 작은 규모의 결산이 지출되었음(〈표 22〉 참조).

- 단, 음영으로 표기된 지역인 △서울(2011), △부산(2011, 2015), △대구(2020), △인천(2014), △대전(2013, 2016, 2020), △울산(2010, 2019), △세종(2016, 2017, 2020), △경기(2020), △충북(2010), △전북(2020), △전남(2010), △경북(2020), △제주(2018, 2019)에서는 예산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결산 지출이 이루어졌음.

〈표 22〉 지역별 시설사업 예·결산 차액 및 비율(2010~2021)

(단위 :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1,485 -3.6%	-31,706 -8.0%	-41,836 -10.0%	-24,024 -5.9%	-30,449 -7.9%	-52,053 -12.6%	-44,919 -10.2%	-62,236 -12.5%	-63,707 -12.6%	-43,456 -7.6%	-2,793 -0.5%	-61,749 -10.2%
서울	-397 -8.3%	2,737 8.5%	-5,121 -14.3%	-3,711 -10.2%	-3,201 -9.4%	-5,573 -14.5%	-8,605 -19.3%	-6,146 -12.9%	-8,828 -17.4%	-9,647 -15.3%	-1,533 -2.7%	-6,323 -10.4%
부산	-188 -10.1%	22 0.1%	-5 0.0%	-1,921 -10.1%	-3,635 -20.0%	427 2.6%	-1,317 -7.5%	-1,608 -8.6%	-2,163 -11.5%	-1,954 -9.5%	-310 -1.4%	-4,481 -19.0%
대구	-98 -8.4%	-887 -7.5%	-1,067 -7.9%	-1,889 -13.3%	-1,439 -11.7%	-1,201 -11.8%	-1,595 -13.5%	-1,653 -12.6%	-827 -6.8%	-1,979 -14.3%	613 4.1%	-2,868 -18.5%
인천	-263 -10.9%	-3,752 -16.6%	-3,172 -15.0%	-75 -0.4%	863 5.0%	-2,506 -17.1%	-1,546 -10.1%	-2,804 -16.2%	-2,855 -16.3%	-2,415 -11.1%	-2,147 -9.7%	-4,434 -16.7%
광주	-40 -6.6%	-1,373 -19.7%	-567 -8.0%	-106 -1.6%	-637 -9.7%	-295 -5.3%	-554 -9.6%	-1,554 -25.2%	-2,320 -31.8%	-395 -4.6%	-228 -2.4%	-2,099 -15.5%
대전	-67 -11.4%	-919 -14.6%	-1,383 -23.8%	28 0.5%	-559 -10.4%	-316 -6.4%	5 0.1%	-721 -11.8%	-955 -14.3%	-1,146 -14.7%	263 3.5%	-1,748 -17.9%
울산	70 10.4%	-1,235 -16.6%	-915 -11.0%	-683 -8.3%	-410 -5.3%	-1,307 -14.3%	-2,699 -23.2%	-362 -2.9%	-162 -1.5%	1,089 10.4%	-88 -0.8%	-1,346 -13.6%
세종	-	-	-539 -48.8%	-685 -32.2%	-692 -21.8%	-1,146 -28.4%	38 1.0%	185 5.5%	-374 -9.3%	-122 -3.4%	361 13.8%	-579 -15.8%
경기	-97 -1.4%	-7,250 -10.3%	-5,375 -7.8%	-2,702 -4.3%	-4,674 -7.8%	-16,966 -21.8%	-10,515 -13.4%	-11,951 -13.3%	-17,030 -16.8%	-1,085 -1.1%	2,198 2.4%	-11,552 -10.9%
강원	-35 -1.4%	-1,418 -5.3%	-1,738 -6.3%	-3,722 -12.4%	-1,042 -3.9%	-4,575 -14.5%	-2,569 -7.4%	-3,037 -8.2%	-3,183 -9.2%	-5,459 -12.9%	-801 -2.0%	-1,251 -3.0%
충북	32 1.8%	-1,469 -7.9%	-1,509 -7.9%	-2,094 -9.7%	-1,818 -9.1%	-1,737 -8.3%	-1,499 -7.2%	-5,237 -19.7%	-1,427 -5.9%	-774 -2.8%	-957 -3.5%	-3,335 -11.0%
충남	-93 -3.4%	-2,493 -9.1%	-2,946 -10.3%	-1,669 -6.1%	-1,685 -6.7%	-3,847 -13.8%	-1,785 -6.3%	-4,994 -15.5%	-2,843 -8.9%	-736 -2.0%	-693 -1.9%	-5,426 -13.1%
전북	-54 -2.5%	-1,906 -7.6%	-386 -1.6%	-857 -3.5%	-593 -2.7%	-2,476 -11.0%	-577 -2.5%	-3,948 -14.7%	-3,950 -14.3%	-4,611 -13.6%	188 0.6%	-2,165 -6.1%
전남	11 0.3%	-3,294 -9.2%	-4,450 -10.9%	-503 -1.3%	-2,740 -7.7%	-3,760 -10.2%	-1,707 -4.4%	-6,709 -14.7%	-5,887 -12.8%	-3,877 -7.1%	-1,133 -2.2%	-6,750 -11.7%
경북	-206 -4.9%	-5,202 -12.1%	-6,943 -14.3%	-2,428 -5.2%	-4,363 -9.8%	-3,390 -7.1%	-3,730 -7.6%	-6,470 -11.6%	-7,181 -12.9%	-8,004 -12.5%	4,041 7.6%	-3,481 -6.0%
경남	-52 -1.4%	-2,551 -6.8%	-4,833 -12.0%	-513 -1.4%	-2,813 -8.1%	-1,605 -4.7%	-5,154 -13.3%	-4,552 -10.5%	-4,670 -10.4%	-3,020 -6.0%	-1,426 -2.7%	-3,467 -6.0%
제주	-6 -0.7%	-715 -7.6%	-888 -8.6%	-493 -4.6%	-1,011 -9.3%	-1,778 -14.7%	-1,109 -8.5%	-676 -4.5%	947 7.1%	680 4.3%	-1,142 -7.4%	-443 -3.0%

주 : 차액은 결산액에서 예산액을 뺀 값을 의미하고, 비율은 차이 규모를 예산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지방정부의 ‘예·결산차액’은 ‘예산액’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더한 금액인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임.¹²⁾

-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예·결산차액 = 예산현액(=예산액+예산성립 후 증감액) - 지출액”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즉, ‘예·결산차액’은 각 사업에 배정되어 지출될 수 있는 최대 경비 한도에서 지출된 실제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차기로 이월될 수 있는 대상 금액을 의미함.
- 따라서, ‘예·결산차액’은 ‘불용액(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천이 되므로,¹³⁾ ‘불용액’을 검토하기 위해 앞서 ‘예·결산차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선결되어야 함.¹⁴⁾

❖ SOC 분야에 속한 세부사업에서 ‘SOC 예·결산차액’ 금액과 ‘시설사업비 예·결산차액’ 금액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함. 그 이유는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액이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계획 및 지출되기 때문임.

- 예컨대, <표 23>에서 가장 큰 규모의 ‘SOC 예·결산차액’이 발생한 세부사업인 서울특별시 본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공원) 보상사업’을 살펴보면,¹⁵⁾ 이러한 경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예산액(4,500억원)은 모두 시설사업비(시설비 4,499.7억원, 시설부대비 0.3억원)로 계획됨.¹⁶⁾
- 둘째, 실제 집행된 2,645억원은 전부 시설사업비(시설비 2,644.6억원, 시설부대비 0.4억원)로 지출됨.
- 따라서, SOC 분야에 속한 해당 사업의 ‘SOC 예·결산차액’인 1,861억원(=4,506억원 - 2,645억원)은 결국 ‘시설사업비 예·결산차액’과 일치함.

❖ 다시 말해, ‘SOC 예·결산차액’이 큰 세부사업에서 ‘시설사업비 예·결산차액’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러한 현상은 ‘SOC 예·결산차액’과 ‘시설사업 예·결산차액’의 지역별 분포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시설사업비 예·결산차액’ 규모가 큰 사업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OC 예·결산차액’ 규모가 큰 사업을 선별하여 2021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SOC 분야를 구성하는 2가지 통계목(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과 지역(광역)을 구분기준으로 하여, 대규모 예·결산차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1개씩 선별하였음.

12)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①전년도이월액, ②예비비사용액, ③이용액, ④전용액, ⑤수입대체경비액, ⑥변경액’의 합계로 구성됨.
 13) 참고로, 불용액(집행잔액)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예·결산차액’에서 ‘차기 이월액’과 ‘보조급 반납금’을 차감하여 도출됨.
 14)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부사업의 비목별 불용액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세부사업의 비목별 예·결산차액을 통해 계획된 예산 대비 과소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
 15) 서울특별시(2021). “2021 회계연도 예산서” 및 “2021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수치를 추출함.
 16) 좀 더 정확히, 예산액 4,500억원에 전년도 이월금액인 6억원을 더하여 총 4,506억원 규모의 ‘예산현액’이 성립함.

〈표 23〉 SOC 분야 예·결산차액 규모가 큰 주요사업 목록(2021년)

지역	사업명	사업 구분		예·결산 차액
		A (교통 및 물류)	B (국토 및 지역개발)	
서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공원) 보상사업		●	1,861억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건설	◎		352억
부산	사상 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		●	334억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		290억
대구	서대구역 광장 조성		●	411억
	안심-하양 복선전철	◎		399억
인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건설	◎		527억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	499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1,284억
	시립 수목원 조성(전환사업)		●	109억
대전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	266억
	대전 ~ 오송 신교통수단(광역BRT) 건설	◎		233억
울산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		●	518억
	태화강역 버스 회차시설 이전	◎		82억
경기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남양주)	◎		247억
	화성 동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	50억
강원	강릉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 사업	◎		170억
	특수 상황지역 개발(접경지역 지원)		●	112억
충북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		137억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	89억
충남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		176억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	118억
전북	안전한 지방도 정비	◎		78억
	생태하천복원사업(아중천)		●	62억
전남	1897 개항 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	81억
	금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30억
경북	제4 일반산업단지 조성		●	206억
	도시계획도로 개설	◎		196억
경남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		●	1,028억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		268억
제주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	173억
	제주외항 2단계 건설	◎		150억
세종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	89억
	여객터미널 개발	◎		51억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한편, 'SOC 예·결산차액'이 0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SOC에 속한 세부사업에서 계획된 예산에 비해 더 작은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서울특별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 서울특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공원) 보상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예·결산차액(1,861억원)은 주로 명시이월액(1,857억원)에 기인하는바, 이는 토지분할, 물건조사 지연 및 토지주 보상 협의 불응, 재결 등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이월된 금액임.
- 또한, 대규모 예·결산차액(352억원)이 발생한 서울특별시의 또 다른 사업인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예·결산차액은 주로 사고이월액(349억원)에 기인함.
- 이는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용역, 관급자재비 등과 시공사의 공사비 물가상승분 협의 미신청으로 인해 이월된 금액임.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별 SOC 예·결산 차액 비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표 24〉참조), 광역도(특별자치도 포함)에 비해 광역시(특별시 포함)에서 평균값이 대체적으로 더 작은 경향(절댓값 기준으로는 더 큰 경향)이 나타났음.

- 즉, 계획된 예산액보다 실제로 지출된 결산액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은 광역도에 비해 광역시에서 훨씬 두드러졌음.
-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광역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광역시에만 존재하는 대규모 시설사업, 예컨대 대규모 광역 및 도시철도, 전철, 신교통수단(광역 BRT)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계획 오차에 기인할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음.
- 실제로, 2021년 서울특별시의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대구광역시의 안심~하양 복선전철, 인천광역시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전광역시의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BRT) 건설사업에서 대규모 예·결산 차액이 발생하였음.

〈표 24〉 지역별 SOC 예·결산 차액 비율의 평균값(2010~2021)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8.5%	-10.5%	-7.9%	-10.2%	-11.3%	-11.7%	-10.1%	-6.4%	-14.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9%	-7.2%	-7.6%	-8.1%	-6.6%	-7.7%	-8.0%	-6.9%	-4.8%

IV 시사점 및 결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SOC 분야 예·결산액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여 공공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축소와 더불어 어려워진 공공 건설사업 환경변화가 지속됨.

 - SOC 예산액은 다른 분야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SOC 예산 비중이 지속 하락함.
 - SOC 결산액 역시 예산액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 대비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전체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함.
 - 특히, 중앙정부 SOC 예·결산 중 시설사업비(건설비+건설보상비)의 비중은 지속 하락함.
 - SOC 분야 예·결산 금액의 변화가 없으나, 물가 변동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축소됨. 또한 시설사업비가 줄어 실질적인 공공 건설시장 규모의 축소가 지속됨.

- 한편, 전체 시설사업비 예·결산액은 지속 감소하며,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함.

 - 중앙정부는 시설사업비 예산액은 감소하면서 시설사업비 예산 비중도 지속 축소된 반면, 지방정부는 시설사업비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축소됨.
 - 시설사업비 결산액 역시 예산액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유사한 추세를 보임.

- 중앙정부 결산 결과, 다양한 분야 및 비목에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SOC 분야는 예·결산액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불용액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SOC 분야 불용액의 30%가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불용액의 34%가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함.

- 한편, 지방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게 도출된 가운데 SOC 분야의 예·결산 차액이 다른 분야의 예·결산 차액과 비교하여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함.

 - 지방정부는 모든 분야에 걸쳐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적었으며(2021년 기준), 특히 SOC 분야의 예·결산 차액은 전체 예·결산 차액의 18.9%를 차지하여 나머지 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SOC 분야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9.5%)이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보다 후(後)순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 SOC 분야 및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및 결산 지출에 비대칭(mismatch)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계획된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시설사업비 관련 추가지출이 필요함을 시사함.

❖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과 여전히 부족한 SOC 분야,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및 기회비용의 상실 지속 발생함.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나,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 발생이 다른 분야 대비 크게 나타나 예산 편성의 조정이 필요함.
- SOC 분야는 시설물의 노후화,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관련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등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음.
-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법령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의무지출이나, 지나친 불용액이 발생하는 반면, SOC 분야는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이어서 삭감 및 축소가 쉽지만, 그 과정에서 기회비용의 상실을 초래함.

❖ 시설사업비 예산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의 발생으로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공공 건설투자의 기대효과가 축소됨.

- 경기 대응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정부 건설투자가 이루어지나 시설사업비 예산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의 발생으로 당초 계획한 건설투자 효과가 반감됨.
- 중앙정부 시설사업비는 연평균 0.9조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6.2조원 가량의 예·결산 차이가 발생하여 공공 건설투자 효과는 당초 예산 편성 시의 기대효과보다 축소됨.

❖ SOC 투자는 SOC 분야에 할당된 모든 예산이 시설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나, 실제로는 SOC 예산을 구성하는 항목에 시설사업비 이외에 다른 비목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SOC 분야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시설사업 관리체계는 시설사업 관리에 왜곡과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 SOC 예산 중심의 시설사업 관리체계는 시설사업 중심의 종합적 시각이 결여될 수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예산 투입의 효율성 향상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시설사업 거버넌스가 필요함.
- 시설사업 거버넌스는 정부나 공기업 등의 공공조직이 시설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에 관한 종합적인 체계를 의미하는바, 시설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자원 계획, 할당, 실행 및 모니터링 등의 재정적 과정을 포함함.

- 구체적으로, SOC 예산에 국한되지 않는 시설사업 예산 중심의 새로운 관리적 시각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시설사업 예산 거버넌스가 필요함.

 - 일차적으로, 시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정치인 또는 정책 담당자의 근시안적 의사결정과 여러 부처에 걸친 분절화·파편화된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체계가 요구됨.
 - 추가로, 시설사업 발주 및 유관 사업의 예산 집행 의사결정 과정에서, 건설업계나 민관합동 협의체를 비롯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공공조직과 민간부문의 시너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SOC 분야 및 시설사업비 예·결산 분석결과(2010~2022), 전체 예·결산 총액에서 SOC 분야 및 시설사업비 예·결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부문 건설투자 효과의 실효성이 감소함.

 - 중앙정부는 총예·결산액은 증가하는 것에 반해 SOC 분야 및 시설사업비 예·결산액의 증가는 소폭에 그치며, 총예·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사업비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매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0.9조~1.2조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함.
 - 지방정부의 SOC 분야 예산액은 매년 약 40조~68조원 규모를 보이고, 시설사업비 예산액은 매년 약 38조~65조원 규모를 나타내면서, 두 가지 수치가 거의 대등하게 변동하고 있음.
 - 그러나, SOC 분야의 예·결산차액(계획된 총예산액에 비해 적게 지출되는 총결산액) 규모는 매년 약 2.6천억~7.8천억원 범위에서 변동하고, 시설사업비의 예·결산차액 규모는 매년 0.2조~6조원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시설사업비 예·결산차액의 변동성이 SOC 분야 예·결산차액의 변동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따라서, 공공부문 건설투자 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 관점의 접근보다 시설사업비 예산 관점의 접근, 다시 말해 '시설사업 예산 거버넌스'를 활용한 전면적인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함.

- 대내외 환경변화로 건설투자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건설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건설투자의 실효성 개선을 통한 건설투자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함.

염근용(연구위원·kyeom@cerik.re.kr)
 이준범(부연구위원·jblee@cerik.re.kr)
 전영준(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